

# “다음 총선 대안세력 목표로 댈 것”

### 정동영·김종희 의원 민주평화당 창당 관련... “호남이 선택하면 대선도 가능”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인 정동영 의원과 김종희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평화당 창당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이 분당 되면 일부의 원들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반일 민주당이 의원배가기를 할 경우에는 국경대비가 올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또한 교섭단체인 20명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며, 다당구도체계에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안세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댈 것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부 36개월을 결산·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중간 심판하려면 대안세력이 필요하지만 한국당은 아니다”면서, “그때 민평당이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평당이 호남의 자민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남 자민련인 한국당은 경의를 받고 당당하다”며 “영남 자민련은 되고 호남 자민련은 왜 안되느냐 호남 자민련을 자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의원과 김종희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평화당 창당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한국당은 영남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과 노선이 있다”면서 “민평당이 호남의 기반과 노선을 가지면 한국당에 맞서는 일대일 구도가 꽤 유리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민평당을 선택하면 (민평당이) 올해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을 넘어 대선도 가능,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이 민평당을 선택하면 대선도 가능”이라고 운을 뚫은 뒤 “우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든 뒤 이를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법원 “국회의원 입법비 영수증 공개하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다 소속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법·정책개발비를 공개한다 해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만큼 사용 내역 영수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수증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어떤 주제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국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에 이름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입법·정책개발비를 받은 사람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사용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란 공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빙서류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시스

### 한원수 도의원, 무원칙 도로보수원 배치 질타

전북도의회 한원수 의원이 1일 도의회 제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별 도로보수원 배치가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시군별로 도로보수원을 배치, 이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시군에 교부해오고 있다.

문제는 도로보수원 배치 시 시군별 담당 도로연장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됐다는 점이다.

실제 한원수 의원의 실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로보수원 1명당 23.0km를 담당하는 시군(순창군)이 있는가 하면, 1명이 무려 78.0km를 담당하는 시군(임실군)도 있어 1명당 담당 도로연장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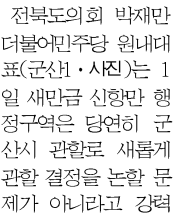
현재 도로보수원 배치 및 인건비 교부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01년까지는 문서확인인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최소 20년 이상 사업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전체적인 지방도 연장이나 교통량 증가 등 제반 여건이 변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보수원 배치현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이처럼 최소 20년 동안 도로보수원 배치에 아무런 조정이 없었던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도는 매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별 시군으로부터 도로관리원 인건비 예산변경 요구액을 신청 받는데,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해서 시군에 신청액 모두를 교부해온 것이다.

한원수 의원은 “순창군은 관내 지방도 연장이 92km지만 도로보수원은 4명이나 배치된 반면, 임실군은 156km로 순창군의 1.7배에 달하지만 도로보수원은 2명에 불과하다”면서 “시군별 지방도 연장과 도로연장, 시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로보수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2001년 이후 도내 지방도 연장이 총 201km가 늘어난 만큼 전체적인 도로보수원 증원조치를 통해 지방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시 관할”

### 박재만 원내대표, 김제시 관할권 주장에 강력 반발



전북도의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군산·사천)는 1일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은 당연히 군산시 관할로 새롭게 관할 결정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전북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결정은 완공된 방조제에 대한 관할 결정이지 새만금 신항만은 2호 방조제 밖 700m 떨어진 해상에 인공섬 방식으로 조성되므로 당연히 군산시에 귀속되어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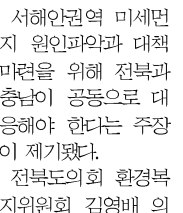
또한 신항만 인접지역인 신시도 비안도 두리도 지역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지난 100여 년간 자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어업면허 발급, 도서개발사업 등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비안도 지역에는 2017년 12월말 현재 145세대 280여명의 군산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항만의 일부로 직접 연결될 계획인 두리도 지역에도 32세대 70여명의 군산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군산시의 자치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서해안 미세먼지 전북·충남 공동 대응을”

### 김영배 도의원, “농도가 높은 원인 파악 위해”



서해안권역 미세먼지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전북과 충남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사천)은 제3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을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며 “서해안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파악을 위한 전북과 충남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저감대책에 따른 효과는 의문이며, 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해, 전북도차원의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2016년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한 바도 있어, 현재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과 익산시민의 건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며 “미세먼지가 높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남과 공동협력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과의 공동대응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국제공조도 함께 준비해 도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는 살기좋은 익산, 앞서가는 익산, 시민이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성공적인 개최!!  
익산의 미래까지 향상!!

익산시의회